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지지를! Free Palestine

관련 기사 4~8면

을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2면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을 밀어내려는 것

3면

•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기자회견

4~5면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 운동과 전략

6~7, 8면

선을 넘은
서민 교수의
급진페미 반감

9면

이선희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12면

•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10면

• 플랫폼 4법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은 미미 11면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성지현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이고, 250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많이 통과되거나 추진되는 법안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전환 의료 조치를 금지하거나,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도 있다.

이런 반(反)성소수자 법안은 30여 개 주에서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올해 들어 공화당의 새로운 표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새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 첫날 ‘학교 내 스포츠 성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공화당의 트랜스젠더 차별 법안이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넘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소송 제기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이런 법안들에 반대하지만, 일부 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동조했다.

트랜스젠더 혐오가 극심해진다

우파들은 법안을 추진하며 “소년들의 스포츠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3월 미국 아칸소주 의사당 밖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 법안 반대 집회

보장”한다거나, 청소년의 성전환이 ‘아동 학대’라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가가 비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피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AP통신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실제 피해를 입은 사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사건을 특정하지 못했다. 2014년부터 트랜스젠더를 스포츠에 포함하는 정책을 실시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여고생의 스포츠 참가가 오히려 더 늘었다.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가 금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조처는 가족이나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학교에서 배척받게 하고, 청소년들

에게 트랜스젠더 차별을 당연시하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 논바이너리* 사람이 24명이나 살해당했다.

청소년의 성전환에 ‘아동 학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춘기 억제제 처방은 우울증과 자살 시도율을 줄이는데, 이런 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HCR은 이렇게 꼬집었다. “한 해 동안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국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공격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우파들은 이렇게 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자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역풍을 덜 맞으면서도 보수 세력을 결집할 새 희생양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기독교 우파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 왔고, ‘가족 가치’를 강조하면서 낙태, 성소수자를 공격해 왔다.(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일관되게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간 미국 국가는 해외 대사관을 통

해 프라이드 집회를 지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트럼프 집권에 성장한 우파들이 여전히 강력하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용어설명

논바이너리

이분법적 성별 규정보다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

추천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외 지음, 정진희 역음, 184쪽, 9,000원, 책갈피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 · 한대부고 판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2019년 7월 서울시의 자사고 13곳 중 8곳에 대해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자사고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

부는 그조차 상향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실 재판부의 자사고 편들기는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지만 실천에서는 꺾여 좌절된 모습을 보인 결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2015년 자사고 재지정 1기 평가 때 우파들의 반발과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밀려 자사고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동요를 거듭했다. 2019~2020년 재지정 2기 평가 때는 부랴부랴 기준을 높여 자사고 8곳만을 겨우 취소했다. 뒤늦게 기준을 상향해 우파와 재판부가 반격할 빌미를 준 것이다.

더군다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등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까지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물론 이 건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규탄해야 한다. (관련 기사: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특권 교육

한편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팽개친 것도 우파의 기를 살려 줬다.

교육부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장 자사고 등을 폐지하면 될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자신의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뤄 버렸다. 이조차 ‘조국 사태’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2019년 11월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고, 그나마 영재고와 과학고는 일반고 전환에

서 제외했다. 차기 정부가 얼마든지 시행령을 되돌릴 수 있어, 2025년에 외고 · 자사고 폐지조차 실현될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경쟁의 핵심 원인인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구축과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더군다나 지난해 5월에는 사립재단들이 자사고 · 외고 · 국제고 등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2025년으로 예정된 일괄 전환이 무산된다.

자사고 등 특목고의 도입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대학 서열화의 축소판이다. 교육과정의 “특성화 · 다양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으로 특목고 도입을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계급과 특권을 대물림하고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특권학교는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사고 · 외고 ·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5~8배 많은 학비를 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인당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노동계급의 자녀는 꿈도 꾸기 어려운 ‘귀족학교’들이다.

특히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외고를 대폭 늘리고 자사고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미적댄 것도 지배계급이 특권 교육과 경쟁 교육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대학 평준화와 경쟁적(계급 차별적) 입시제도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을 밀어내려는 것

장호중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서'의 핵심 부분이다. 이를 통해 거대 제약기업들은 20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받고, 엄청난 이윤을 거둬 왔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 얻은 이윤이라고 할 만하다.

HIV/에이즈 치료제는 이미 1990년대에 개발됐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약값을 낼 돈이 없어 한 세대가 속절없이 죽어 갔다. 백혈병 같은 치명적 질병을 완화시키는 약들이 개발됐지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선진국의 서민들도 고통받아 왔다. 2000년대 내내 거대 제약회사들의 횡포를 규탄하고 특허권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돼 온 이유다.

그럼에도 인도 등이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하는 조처들을 쓴 것을 제외하면 특허권과 세계무역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는 없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무역 보복으로 빈국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이태복 복지부 장관이 약값 인하를 시도했다가 국내의 제약회사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보다 미국 패권 강화에 골몰하기는 마찬가지 메릴랜드 육군 병원에서 백신 접종 준비 과정을 살펴보는 바이든

로비로 쫓겨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자 인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특허권 면제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끼친 충격에 놀란 일부 선진국 지배자들도 이 요구를 지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요지부동이였다. 오히려 백신 원료 수출을 제한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의 해외 공장 백신 생산도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그런데 5월 초에 바이든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팬데믹 기간에는 특허권 면

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같은 미국 제약기업들은 물론이고 독일 메르켈 정부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에서 충분히 조율을 거치지 않은 입장 발표였던 것이다.

WTO

바이든 정부의 태세 전환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백신 공급을 제한하는 동안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 백신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50여 개국에 자국산

백신을 수출한 데 이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10여 개 나라에는 기술도 이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 시노팜 사의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특허권 면제 지지 발표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기업이나 정부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다. 그런데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개발한 제

약기업들은 백신 기술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질나노입자 기술'의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 기술을 '도난'당할 위험을 감수할지언정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경쟁 기업이나 정부들이 이 기술을 쉽게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일 테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바이든 정부의 특허권 면제 지지 발표는 결국 생색 내기용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거대 제약기업들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반발 때문에 WTO에서 안전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로 한 데에는 미국 내 백신 접종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자들의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이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보낸 메시지는 이제 모두 일터와 학교 등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가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는 재확산을 낳을 위험이 다분하다. 바이든은 재확산이 몇 차례 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안으면서도 이 조처를 강행했다.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 한 집단면역 실험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은 시도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터널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코인(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강동훈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4대 코인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신규 가입자는 249만 5000여 명(중복 포함)이나 됐다. 불과 석 달 만에 이용자가 거의 갑절(511만 4000여 명)이 된 셈이다. 특히 20~30대가 1분기 신규 가입자의 3분의 2(158만 5000여 명)나 됐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유명한 코인 외에도 온갖 코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세계적으로 거의 1만 종류에 이를 정도다. 이 중 한국의 코인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코인만 200여 개에 이른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암호화폐 거래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도박임을 보여 줬다

다. 새로 만들어진 코인의 판매 과정에서는 노골적인 사기 행각도 벌어지는 듯하다.

최근에는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의 말 몇 마디에 각종 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코인 투기판의 광기적 실체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처럼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한국은행·금융위원회·정부 당국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관료들은 투기판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훈계조의 말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규제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코인 거래소들과 각 코인의 위험성을 은행들이 알아서 평가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코인 거래로 얻는 수익에 정부가 과세한다는 방침

은 재확인했다. '도박판에서 자칫세나 겠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코인 투기와 거품을 경고하면서도 이를 적극 규제하지 않는 것은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신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험천만한 투기 공간을 더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투기를 부추기는 세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광기

최근 세계자본주의가 경기 침체에서 근본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과 실업이 만연하다.

자연스레 노동자와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 취업도 걱정, 취업해도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 고용 불안이 스트레스를 유발

한다. 이들 중 적잖은 수가 비트코인 거래와 같은 거대한 도박장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코인 투기 광풍이 불안감과 걱정을 자아내긴 하지만, 따져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 돈벌이라는 주식·파생금융상품·외환 투기 등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별 쓸모도 없는 코인을 '채굴'하는 데에 막대한 전기가 사용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낭비인 것은 맞지만, 기후 위기 시기인데도 심해와 암석 사이에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비이성적 과열도 조장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험한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는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체제다.

먹고살려면 단조롭고 소외된 노동을 반복해야 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면 어찌다 정말정말 운 좋게 대박이 터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사회를 근본에서 변화시켜야만 비이성적 과열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런던에서 바그다드까지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다

김준호

5월 11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온갖 중화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 8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215명이 죽었는데 그중 61명이 어린이이다. 1400명이 넘게 다쳤다. 가자 지구에서 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인 살마는 14일(금) 하룻밤 동안에만 830명이 다쳤다고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했다.

이번 공격은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시(市)에서 정착촌 건설에 맞선 저항을 이끌고 있는 활동가 이사 암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경찰이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예배자들에게 휘두른 폭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폭행하고 사원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의 이런 인종 청소 시도를 규탄하는 대중 항쟁이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분출했다.

암로는 이렇게 말했다. “14일 서안 지구에서 약 200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설치한 검문소로 몰려나와 점령 중단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아파트헤이트’를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종차별 국가”

5월 15일에는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시위가 분출했다.

5월 15일은 ‘나크바의 날’이다. 대재앙을 뜻하는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당하고 최소 80만 명이 고향을 잃은 것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미국·영국 등에서 대규모 연대 시위가 두드러졌다.



“저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다” 5월 15일 영국 런던 거리를 메운 10만 시위대

공습 이후 매일같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벌어진 영국 런던에서는 5월 15일에 10만 명이 거리를 휩쓸었다.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다.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다” 하는 구호가 런던 거리를 뒤흔들었다.

‘핵무장해제운동(CND) 사무총장 케이트 허드슨은 이날 시위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떠들어 댁니다. 하지만 온갖 잔혹한 무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위권은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날 런던 시위는 진정한 다인종 시위였다. 유대계 사람들도 대열을 지어 참가했다. 이스라엘 비판이 곧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다.

런던뿐 아니라 버밍엄, 맨체스터, 카디프, 셰필드, 코번트리, 뉴캐슬 등 영국 곳곳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크게 벌어졌던 주요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필라델피아·휴스턴 등지에서 수천 명 규모의 시위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시위대는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를 강력 규탄했다. 공습 직후 이스라엘의 “자위권” 운운했던 바이든은 15일에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의 통화에서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 지구의 테러 단체들의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해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시

켜 줬다.

뉴욕 시위에 참가한 35세 청년 엠란 칸은 이렇게 응수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고, 팔레스타인 마을 사람들은 이스라엘군 탱크에 돌격을 던집니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백하지 않나요?”

이날, 미국의 유명 진보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최초의 팔레스타인계 하원의원 라시다 틀라립도 “이스라엘은 아파트헤이트(인종차별) 국가”라며 연대를 표했다.

〈알자지라〉워싱턴DC 특파원 존 헨드런은 미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였으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정부나 그 이전 미국 정부들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대한 불만이 피부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바이든의 위선을 꼬집었다. 이날 바이든은 ‘이드 알피트르(라마단이 끝났음을 경축하는 날)’ 행사에 참가했다.

시민단체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성명을 발표해 바이든을 규

탄했다. “우리 무슬림들은 ‘아파트헤이트’ 국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남녀노소를 폭격하는 것을 말 그대로 지지·지원·정당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함께 이드 알피트르를 경축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자

그 밖에도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터키 앙카라, 벨기에 브뤼셀 등 세계 곳곳의 대도시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파리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시위를 불허하고 시위 집합 경찰을 배치했음에도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아랍 세계에서도 연대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과 요르단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대도시와 국경 지대에서 벌어졌다. 몇몇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국경을 넘어려 하다가 이스라엘군과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레바논인 최소 1명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미국의 동맹인 카타르의 도하뿐 아니라, 미국의 점령에 오랫동안 신음해온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대규모 연대 시위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암로는 이렇게 말했다. “15일에 전 세계 곳곳의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에 이를지도 모르는 시위대를 보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혼자자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투쟁도 모든 사람이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들도 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학살만 행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도 규탄했다.(관련 기사 5면)

5월 22~23일에도 영국·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옹호하는 행동이 예정돼 있다. 한국에서도 그런 연대를 이어가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 대중 항쟁이 계속해서 콜롬비아를 뒤흔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원인을 저버리다

★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사진 출처: Matt Hinch(블리커)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라” 팔레스타인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외치다

김준호

5월 18일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 중단하라”가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가 주최했는데, 급하게 제안되고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들은 저마다 팻말과 이스라엘 공격의 희생자 사진을 들고 “팔레스타인에 해방을(Free, free Palestine)!”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더했다.

한국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인종차별 국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저항을 한목소리로 옹호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야세르 씨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팔레스타인인만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 있고 저항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다” 하고 연대를 호소했다.

야세르는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 이후 마지막 남은 식민 국가인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한국의 독립 투사들의 투쟁처럼 완전히 정당하다”고 했다.

뒤이어 발언한 시리아 출신의 압둘 와합은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의 시리아인들이 모두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집, 학교, 병원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스라엘만 지지·지원하고, 이스라엘하고만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5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번 공격에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과 팻말을 들고 있다

언론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민간인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유·평화를 지지해야 할 한국 정부도 가해자의 손만 잡고 있습니다. 많은 아랍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렇게 발언했다. “스스로를 지킬 권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사람들을 가둬 놓고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폭력의 근원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논평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도 모자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더 부각해 사실상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강대국들은 평

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국제 사회’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싸움터일 뿐 이번 미안마 항쟁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저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 자신의 투쟁과 국제연대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중동 민중 전체를 고무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싸우는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된 노력의 일부입니다.”

대학생 양선경 씨는 발언에서 “한국의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홍콩 항쟁,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미얀마 항쟁을 지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종차별·강탈·폭력·테러·살육의 역사입니다. 이번 공습도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억압과 폭력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쫓겨나고 죽어야만 합니까? 아무 죄 없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두고 봐야만 합니까?

“하마스도 저항의 일부입니다. 하마스의 무력 행사는 이스라엘이 행사해온 폭력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양측 모두 폭력을 멈추라는 촉구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거듭 옹호하고, 문재인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흐려렸습니다. 이 민주당

정부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기자회견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구호로 거듭 외쳤다. 회견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이스라엘에 패배를(Down down Israel)!”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들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계속 방해했지만, 뜨거운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옹호하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로, 한국에서 벌어진 첫 연대 행동이다.

제국주의와 야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연대를 이어 가야 한다.

체포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는 미얀마 군부

미얀마 군부는 저항 세력이 장악한 민닷시(市)를 탈환하면서, 체포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5월 15일 미얀마군은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산악지대에 있는 민닷시를 습격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주주의 항쟁 투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민닷시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군대와 격전이 벌어졌다.

동틀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총격전이 계속됐다.

한 저항 투사는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람들이 체포돼 인간 방패로 쓰이는 상황이라 반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포탄을 쏘며 우리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반격을 무력화시킨 군부는 도시에 병력 수천 명을 투입했다.

주민들은 정권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체포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군부가 반격에 부딪

히기도 했다. 단발 사냥총으로 무장한 반란자들이 민닷으로 이동하던 군차량을 습격했다.

이들은 미얀마군 약 20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6대와 무기고 하나를 탈취했다.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군부의 지배에 맞선 대중 항쟁이 결코 시들지 않았다는 증거다.

출처 영국군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5호

번역 김준호



5월 초 미얀마 북서부 민닷시에서 목격된 미얀마군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 운동과 전략

박이람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더리티》 공동편집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팔레스타인인 공격이 연일 신문 지면에 오르고 있다. 폭격의 잔해 속에서 울부짖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여성들, 예루살렘 알아크사 모스크 앞에 모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최루탄으로 해산시키는 이스라엘 경찰들의 모습을 담은 참혹한 사진·영상 등은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이런 보도들은 대개 폭력의 참혹함을 부각하는데,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앞세우며 둘 모두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 등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저항 수단을 비타협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인종 청소

이번 저항은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셰이크 자라 구역에서 시작됐다. 이스라엘 법원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현재 거주 중인 가옥에서 퇴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법원 명령 이후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경찰은 셰이크 자라 구역을 침탈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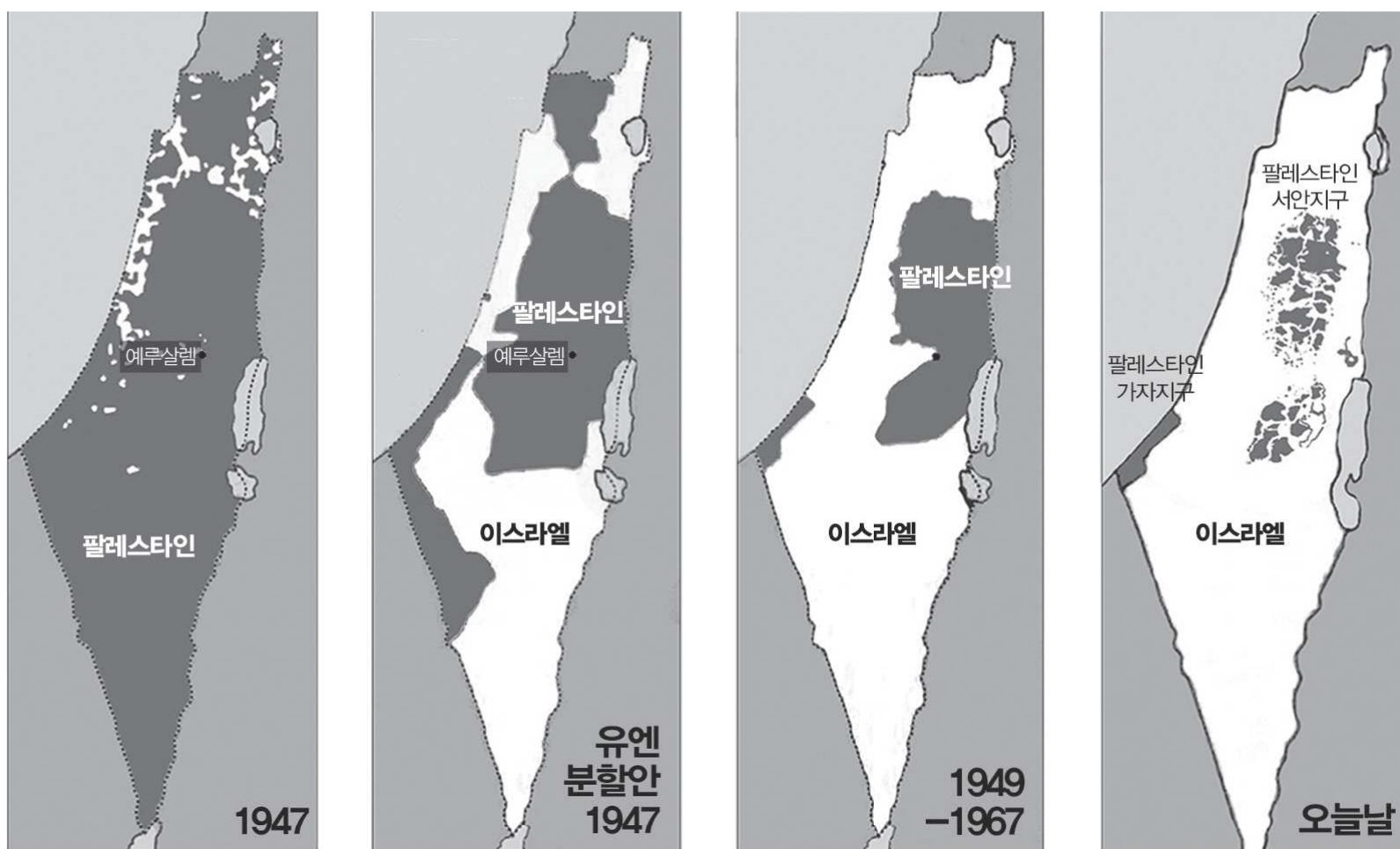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유대인 정착민들로 채워 온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침략 야욕과 인종 청소, 폭력으로 점철된 끔찍한 과정을 거쳐 1948년에 건국됐다. 이스라엘 건국은 당대 세계 최강국인 영국의 중동 패권 유지 전략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온주의자들의 야욕이 맞물린 결과였다.

1917년, 당시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시온주의자들이 벌인 끈질긴 로비의 성과이자 영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였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 수행을 지원하면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을 위한 모국을 세우는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 장소로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이 낙점됐고(여기에는 페르시아만 유전 지대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을 보존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거치며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 이주민들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한 목적지는 영국이었지만 시온주의자들의 강요와

팔레스타인의 영토 변화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며 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온주의자들. 이런 지독한 만행은 미국 등 제국주의의 막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서방 국가들의 공모 속에 중동으로 간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간 시온주의자들은 그곳에 사는 아랍인들의 집과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았다. 시온주의 조직 ‘히스타드루트’는 아랍인 상품 불매 운동, 아랍인 노동자 일터에서 추방하기 등 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였다. 시온주의 민병대 테러 조직 ‘하가나’·‘이르군’ 등은 아랍인 마을을 습격하고 학살·방화·약탈·강간을 벌였다. 영국은 이 테러 조직들에 무기를 제공했다.

바로 이것이 1948년의 ‘나크바(대재앙)’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의 80퍼센트에 이르는 최소 75만 명이 학살과 공포를 피해 레바논·시리아·요르단 등지로 피신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국주의와의 유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나크바’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세운 시온주의자들은 아랍인들을 감시하는 대가로 영국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자 했고, 건국 이후에는 미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유지했다.

제국주의의 지원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1967년, 1973년 등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은 인구에 견줘 턱없이 좁아졌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 시온주의자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제

국주의 열강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 정착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런 저항의 중심이었다.

1959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랍 민족주의 저항 조직 ‘파타’를 결성했다. 파타는 이후 팔레스타인의 대표 기구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최대 분파가 돼 저항을 주도했다. 그런데 파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맞선 무장 투쟁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아래로부터 저항을 조직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1987년에는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대중 항쟁 ‘인티파다’를 일으켰다.(관련 기사 본지 233호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팔레스타인인 모두가 항쟁에 동참했고, 이집트·터키·시리아 등지로 연대 시위가 확산됐다.

하지만 PLO 지도부는 운동을 단속하는 데에 급급했고, 1993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포섭돼 오슬로에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오슬로 협정). 이 협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1967년 전쟁 당시 국경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수립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골자로 했다.

이 협정으로 PLO 지도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비교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PLO는 독립된 경찰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PLO 지도자들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팔레스타인자치기구(PA)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기는커녕 PA의 지배에 도전하는 팔레스타인인 활동가들을 자체 보안 부대를 동원해 투옥·고문했다.

하마스(‘이슬람저항운동’의 약자)는 PA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만에 힘입어 성장했다. 하마스는 2000년 ‘2차 인티파다’ 당시 크게 성장했다. 2차 인티파다는 오슬로 협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이를 사실상 옹호하는 PA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일어난 항쟁이었다.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과 파타가 서방의 후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서안지구에서 하마스를 쫓아냈다. 그래서 현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파타가 서안지구를 통치한다.

하지만 오늘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그에 따른 고립 속에서 애초의 핵심 원칙을 저버렸다. 예컨대,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

한편, 이스라엘이(오슬로 협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영토인)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 7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는데도,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PA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착촌 주변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수시로 공격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제외

한 팔레스타인 영토 거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점령하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계 이스라엘인들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상시적 차별과 천대, 약탈에 시달리고, 이에 못 이겨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난민이 되기 십상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아랍인·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인종 청소를 시도하는 체계적 인종차별 국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다.

해방의 전략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먼저, 팔레스타인인들의 적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땅을 무력으로 뺏고, 애초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 계획했던 시온주의자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수립된 국가 이스라엘이 그 적이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도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경비견”(이스라엘 자신의 표현이다!) 삼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지원을 쏟아

용어설명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존재했던 인종차별 체제를 일컫는 말로, 체계적 인종차별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끊임없이 이어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아랍인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하도록 고무하는
구실을 해 왔다

붓는다. 그런 지원은 이스라엘의 존
속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번 공습에
서 (역대 미국 정부들처럼) 이스라
엘을 강력히 옹호한 바이든은 5월
17일에 이스라엘에 7억 3500만 달
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제국주의 열강에도 반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외의 한국-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 규탄받아야 한다.

아랍 국가들의 지배자들은 팔레스
타인의 편일까? 이들은 말로는 팔레
스타인 독립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군사·안보 교
류를 매우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심
지어 트럼프 정부 시절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수
단·모로코·이집트 등은 지금 말로
도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정'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
과 안전은 관심 밖이다. 이들은 언제
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두려워
했고 지금도 그렇다.

아랍 지배자들은 팔레스타인 저항
이 자국으로 번질까 봐 편집증적으
로 군다.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타흐
리르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기자 한 명을 체
포했고(이 기자는 행방불명됐다), 알
제리 정부는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했다.

아랍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
라엘과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
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인터
파다는 수많은 아랍인들을 급진화시

켰고, 끊임없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인들의 저항은 아랍인들이 자국 지
배자들에 맞서 저항하도록 고무하는
구실을 해 왔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고무돼 터키·레바논·요르단·이
라크·카타르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
가 분출했다. 이런 저항은 아랍 지역
에서 자국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으
로 발전할 수 있다.

아랍 세계의 저항은 팔레스타인
해방에서 핵심으로 중요하다. 작고
한 팔레스타인 출신 영국 사회주의
자 토니 클리프(1917~2000)는 “예
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카이로를
통한다”고 했다.

2011년과 2019년 중동을 흔들었
던 두 저항 물결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었다. 아랍 혁명의 현장에는 언
제나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꼈고,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두 차례나 점거
했다. 이런 저항들은 그 나라 지배계
급이 이스라엘, 제국주의 열강과 결
탁해 있음을 가차 없이 폭로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그런 해방
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활짝 보여 줬
다. 이집트 가스 노동자들은 이스라
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중단을 요
구하며 파업했고, 이집트 혁명가들은
가자지구와 접한 국경을 허물어 이스
라엘의 봉쇄에 신음하던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아랍의 해방
에 필수 요소라는 점도 중요하다. 아
랍 민중이 해방되려면 팔레스타인을
짓누르고 아랍 각국 지배자들과 때
로 유착하고 때로 갈등하는 이스라
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경비견으
로 삼는 제국주의와 대결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존속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자들의 해법이지 팔레스
타인과 아랍 민중을 위한 해법이 아
니다.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경비
견”이자 강탈 국가, 인종차별 테러
국가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세력들, 아랍 지배자들 모
두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
대만이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을 해방
시킬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서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역사

1917년 제1차세계대전 중 영국은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독
립을 약속하며 반란을 고무했다. 동시에 시온주의자들에게도 팔레스타인에
시온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벨푸어 선언).

1939~1945년 제2차세계대전 동안 많은 유럽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
원래 유대인들이 선호한 목적지는 영국이었지만 시온주의자들의 강요
와 서방 국가들의 공모 속에 중동으로 간 것이다.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영토의 55퍼센트를 유대인 몫으로 인정한다는 분할안을
발표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전체의 3분의 1이었다.

1948년 유엔 분할안과 서방의 후원에 고무된 시온주의 민병대가 분할안보다 더 넓은 영
토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85만
명이 쫓겨났다.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어 각각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1959년 아랍 민족주의 성향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인 '파타' 결성. 파타는
1960~1970년대 팔레스타인 저항을 이끈 주요 그룹이 된다.

1967년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시리아 골란 고원, 동예
루살렘 등 나머지 팔레스타인 영토를 차지했다.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가혹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됐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용성을 서방 제국주의에 각인시켰다.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친미 국가로 돌아섰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랍 국가들의 합의가 깨졌다.

1982년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 침공 중이던 레바논에서 약 36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난민 수천 명을 학살했다(사브라·사틀라 난민촌 학살).



1987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 맞선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1차 인티파다). 이집트,
터키, 쿠웨이트, 시리아, 튀니지 등지에서 현지 지배자들에 대한 불만과 결합돼
연대 시위가 확산됐다. 아랍 지배자들을 동맹으로 여긴 파타는 운동을 단속했
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인 '하마스가 결성돼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1993년 미국의 개입으로 파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차지 정
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오슬로 협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지지만, 난
민 귀환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고 동예루살렘 문제도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1995년 미국 의회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을 통과시켰다. 예루살렘 전역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
한 셈이다.(그러나 실제 대사관 이전은 계속 미뤘다.)

2000년 오슬로 협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이를 사실상 옹호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
발해 팔레스타인에서 2차 인티파다가 분출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세
가 강한 가자지구를 봉쇄했다. 또 다른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를 격퇴하
고자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실패했다.

2007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파타의 쿠데타를 사주하지만 쿠데
타는 실패했다. 이후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서안지역은 파타가 지배하게 된다.

2009년 이스라엘이 하마스 격멸을 내걸고 가자지구를 침공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곧 퇴각한다.

2010~2011년 아랍 혁명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했다.

2012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에 나서지만 혁명적 민심을 우려한 미국과 주변국 지
배자들의 만류 속에 8일 만에 꼬리를 내렸다.

2013년 7월 이집트에서 군부의 반혁명으로 엘시시가 집권했다.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또 폭격했다. 아랍 혁명의 퇴조 속에 이스라엘은 50일 넘게 가자지구를 마음껏 유린하지만 하
마스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2017년 10월 가자지구 봉쇄 10년째. 하마스가 고립된 가운데 이집트의 중재로 하마
스가 가자지구를 파타에게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해 이듬해 1월 협약이 깨졌다.

2017년 12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하며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시작됐다.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돌아갈 권리'를 요구했다.

2018년 7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배타적 국가로 명시한 '민족국가법'이 통과됐다.

2019년 11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정착촌은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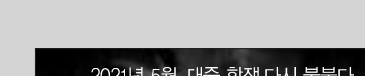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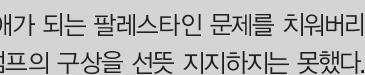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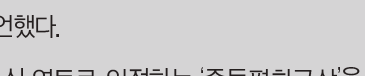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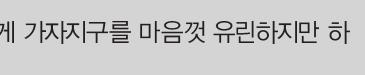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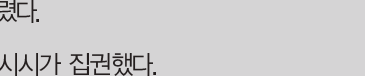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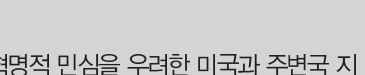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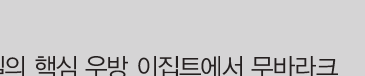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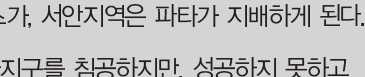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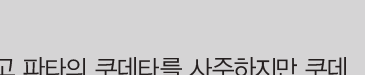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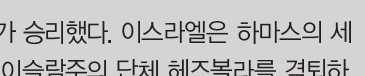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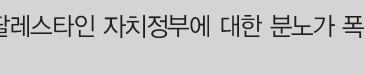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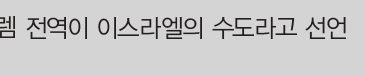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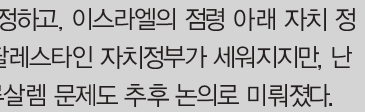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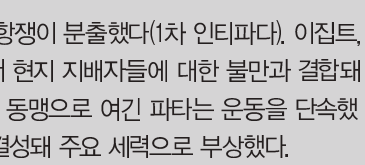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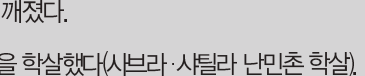
2020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의 무단 점령지와 정착촌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의 공식 영토로 인정하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란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묶는 데 장애가 되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치워버리
려 했지만, 걸프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중의 반발을 의식해 트럼프의 구상을 섣뜻 지지하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속도가 붙는다.

2020년 7월에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 계획을 발표하지만 그 파장을 우려한 서
방 국가들의 압력으로 연기했다.

2020년 8월 대표적인 걸프 국가의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상화했다.

2021년 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백신 공급을 가로막고 하마스에게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2021년 5월 11일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는 시도에 맞선 팔레스타
인인들의 저항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했다.



김종환·이원웅

추천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그 뿌리와 진정한 해법**

일시: 5월 21일(금) 오후 8시

발제: 박이랑 (중동 문제 전문가
(하틀리스트 솔리데리티) 공동편집자)

참가: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페이지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이원용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9일 현재 팔레스타인인 215명이 사망했다. 그중 61명은 어린이고 36명은 여성이다.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5만 2000명이 집을 떠나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로 피난을 갔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팔레스타인인 가족들은 폭탄이 떨어져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며 각자 다른 방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다. 가자지구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폭격은 이스라엘에 대든 것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사하고 있다는 “자위권”의 본질이다.

네타냐후는 “평온함을 되찾을 때까지 폭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양측의 진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두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이다.

많은 언론과 정부들이 바로 그러고 있다. 5월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그다지 심각한 과민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이스라엘을 거듭 비호했다. 네타냐후는 “국제적 압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에게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며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이스라엘을 두둔한다. 문재인 정부는 5월 13일 외교부 논평을 내 “특히 가자지구로부터의 무차별적 로켓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해, 사실상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더 부각하고, “당사자들이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만행에 눈감았다.

이는 폭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흐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땅에서 유대인이 인종적 다수를 유지하게 하려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무력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았다.

이스라엘 국경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체계적인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렸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하에 살면서 삶의 모든 측면을 제약받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를 그저 유대인들과 벌이는 종교 갈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두 국가 해법”?

서방 정부들은 양측의 진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도 외교부 논평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현상 유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묵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예루살렘에 대한 ‘현상 유지’는 곧 그곳에서 자행돼 온 팔레스타인인 배제와 탄압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이미 7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정착촌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은 더한층 비현실적이게 됐다. 한편, 정착촌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늘어나게 됐다.

그렇스록 표면적으로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의 병존을 주장하는 세력(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노동당; 시온주의 정당)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 입지가 좁아지게 됐고, 팔레스타인들을 더 철저히 배제하고 짓밟기를 바라는 더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

따라서 사태가 이토록 첨예해진 데에는 일부 언론들이 묘사하는 ‘정치의 실패’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서방 국가들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정착촌 확대가 중동에 가져다 줄 불안정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연대가 관건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는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인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총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교사 노조, 대학 교원 노조, 변호사 협회 등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도하는 BDS 운동(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투자 철회·제재를 촉구하는 운동)도 여기에 지지를 표했다.

이전에도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정부를 이끄는 파타가 상징적으로 파업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동 전문 매체 <미들 이스트 아이>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도하고 조직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반향을 낳는다면 반란이 훨씬 심화될 것이다. 반란이 더 성장하고 조직적이 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파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도 호소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승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5월 18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열린 바 있다. 이런 연대 노력이 지속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폭압적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그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5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이현주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비정상화하고, 비혼·1인 가족 등을 정상외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며 ‘페미니스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했다. 서 교수는 급진적 관점에서 우파 정부를 비판하고 신랄하게 풍자해 유명해졌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을 가해 왔다.

더구나 그는 ‘남성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동성애를 방어했었다. 글과 강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 외모, 경력 차별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비판하며, 남성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페미니즘을 지지하기를 촉구했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마저 수용했었다.

그러나 서 교수의 지지자들이 이번 언행을 보고 몹시 당혹스러울 법하다. 행사를 주최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매우 보수적인 단체다. 개신교 우파와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삭제)·낙태·차별금지법·동성애·동성혼 등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정치적 우파와의 직접적 연계성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대표 이봉화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조국 사태

서 교수의 주장을 보면, 그가 페미니스트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페미니즘에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협력해 온 여성계 지도자들에 대한 극심한 환멸이 있는 듯하다.

사실 서 교수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참가했고, 그 뒤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래서 서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보여 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가차없이 공개 비판했다. 이는 조국 사태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대중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지난 정권 때 총리 후보자들에게 추상같은 잣대를 적용했던 야당은 집권당이 된 지금 조국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로남불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이 돼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2019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

특히, 당시에 정의당·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들마저 조국 옹호론을 펴고 대표적 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입을 꼭 다물어 사실상 정부를 비호하던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때 서 교수는 공직에 진출한 엔지오 지도자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 듯하다.

“저는 시민운동하던 이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들이 얻은 권력을 이용해 원래 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일이니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정계진출은 곧 그 단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로 끝나더군요. 참여연대 보세요.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을 때마다 쓴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우르르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진보인사의 비리에 침묵하잖아요.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지요.”(《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271쪽)

윤미향 의원 사태

서민 교수는 2019년 10월 《윤지오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 그는 상세한 정황증거가 뒷받침된 논증과 추정으로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가 사기꾼일 뿐임을 폭로했다. 그리고 윤지오를 도운 언론과 정치인들도 비판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윤지오를 도운 여성단체들은 공개 비판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20년 봄, 윤미향 의원 사태를 거치며 페미니스트들과 단절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정의기억연대 리더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윤미향 의원의 정치적 부패 의혹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회계 부정을 지적하는 건 시민운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이야 하는데 34개 여성단체가 윤미향을 지지했다. 회계 부정에 관한 이야기는 위안부 단체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다. 외부세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할머니 편이 아니라 권력자인 윤미향 편을 들더라.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이러는구나 생각했다.”(2020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위안부를 이용해 돈과 권력을 취해 왔다고 보는데, 알고 보니 페미도 여성의 낮은 지위를 이용해 돈과 권력을 취해 왔던 것이죠.”(2020년 8월 11일자 <미래한국>)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운동 과정에서 시스템에 포섭돼 “돈과 권력을 취한” 것이 각별히 대중의 환멸을 샀다. 여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잠재력이 있는데도) 대형 엔지오가 국가와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는 관행,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 의존하는 개량주의 전략의 약점이 크게 작용했다.(관련 기사: 본지



문재인 정부와 여성계 지도자들에 반감은 공감하지만 보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다

323호,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①: 부정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부정 의혹에 대한 설득력 없는 해명과 오만한 대응으로 대중에게 더 큰 환멸감을 줬다. 정부와 여당은 조국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여권뿐 아니라 진보계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어물어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노동자 연대> 신문은 이런 ‘제식구 감싸기’ 식 태도가 진보계를 도매금으로 불신하게 해 우파가 이를 이용해 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327호,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여성계 일부 지도자들은 윤미향을 대놓고 감쌌다. 나머지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었다. 윤미향을 공개 옹호한 여성계 대표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성전화 고미경 대표 등 — 은 당시 정의연의 이사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여성단체 지도자들에게 자연스레 환멸감을 느낀 듯하다. 서 교수뿐 아니라 적잖은 진보 영역 청년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배신당한 심정은 심본 공감해도, 여성·성소수자 차별을 방어하는 보수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크게 오버 하는 것이다. 분노와 환멸이 너무 큰 나머지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영논리와는 다른 대안

물론 “돈과 권력에 취해 왔다”는 서 교수의 비판은 여성 엔지오 주요 지도

자들에 대한 뼈아프고 예리한 지적이다.

한국의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대부분 말로는 급진 페미니즘 경향이지만, 실천으로는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부와 국회 등 자본주의 국가 기구로 진출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그 지도자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연계를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포섭돼 왔다. 여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등의 국가 관료로 편입되거나 정부와의 거버넌스 사업 등을 맡으면서 그렇게 해 왔다. 민주당 등이 영입해 총선에 공천되는 것도 그 일부다.(관련 기사: 본지 258호,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그들은 자유주의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그 정부·정당의 일원이 되면서 이들과 더 일체감을 느끼고, 여성운동의 애초 목표와 원칙, 대의에는 둔감해졌다. 그래서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윤미향 비호는 개량주의적인 성주류화 전략에 담긴 핵심 난점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념적 급진 페미니즘이나 성 주류화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다가 성평등 사상과 운동 자체에 등을 돌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 애까지 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단지 서 교수가 반대하는 종류의 급진 페미니즘만 협소하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상·운동 전반을 가리키는 매우 느슨한 용어로 쓰인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복수의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그들이 자신들의 보루로 여기는 국가 기구들이 다양한 페미니즘들과 여성의 요구를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조국 등 여권 인사들, 여성단체 일부 지도자들의 부패와 위선에 반감이 생겼다고 해서 보수적 운동과 조직에 동조하는 것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일 뿐이다.

서 교수가 그토록 비판해 온 종류의 진영논리는 민주당 아니면 우파 둘 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이분법에 근거한다. 이 전제에 따라 여권 인사들은 서민 교수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진보 운동가들에게 여권의 위선과 부패에도 눈을 감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므로 서 교수가 진영논리를 벗어나겠다는 보수파와 잘 지내려 애쓰는 것은 결국 자본가 계급의 양당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이분법 구도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일 뿐이다.

보수파의 페미니즘 비판은 그저 반사이익을 얻어 사회 전반에서 보수적 호감을 강화해 보려는 위선과 책략일 뿐이다. 그들은 여성 차별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해 왔고, 거기서 득을 본다. 이 지점에서 보수파가 우파가 되는 건 없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것이다.

서 교수의 최근 행보는 문재인 정부와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진보·좌파측의 진정한 대안이 부재하고 화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공백을 사회적 보수파와 정치적 우파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안은 지금까지처럼 중간계급 여성의 지위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서민층 여성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급투쟁과 융합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치 완전 퇴색

김은영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일부만을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위탁 운영하게 했다.

현재 2년째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재정 책임 회피와 후퇴로 꼬죄죄하다. 정부 계획대로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포용하는 일자리 규모는 전체 돌봄 일자리의 5.7퍼센트에 불과하다.

서비스의 질도 민간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서울사회서비스원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체 수익 구조로 운영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탓에, 다른 지자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서울시조차 사회서비스원에 지속적인 수익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는 시급제 노동자 채용을 통한 인건비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사회서비스원법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물 건너 간 지 오래

결국 정부가 시장 중심의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탓에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질과 노동조건 향상은 민간에 비해 두드러진 차별성이 별로 없거나 크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절차·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그것이다.

일각에선 남인순 의원안에 대한 기대도 나왔지만, 이 법안은 이미 현실에서 드러난 여러문제를 해결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기존에 이미 민간 위탁된 사회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둔 채, 신규 국공립 시설 등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해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고착화

심지어 일부 문제는 개선은커녕 고착화할 위험조차 안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가 없는데다 사실상 사업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수익성 논리가 강조되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노동조건이

하향 압박을 받기 쉬워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민간업자들은 이조차 자신의 이윤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해 11월 초, 국민의힘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우파와 민간 기업주들은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재정만 축내고 민간업자들의 이윤을 줄인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반발이 있을 때마다 후퇴해 왔는데, 최근에도 정부는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한

층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서는 신규 국공립 시설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을 받는게 아니라, 민간과 사회서비스원이 입찰 경쟁 절차를 하도록 바꾸려 한다.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대상 범위는 민간이 기피하거나 민간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로 대폭 축소하고, 우선 위탁 대상이었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도 제외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에도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처럼 우선 위탁 조항조차 대폭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더는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지 않고 민간에게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위기가 심화하자, 민간 사업주들과 우파들에 타협하면서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후퇴하자 국민의힘은 더 기세등등해져 사회서비스원에 우선권을 주는 예외조항도 모두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런 후퇴 조짐이 보이자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이런 후퇴에 반대해 민주당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매우 미흡하고 문제점도 있는 법이 일단 제정되면, 이를 바꾸는 일은 그만큼 더 만만찮게 어렵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포용적 복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결국 그들의 포용 대상은 민간 기업주들에 기울어 있다. 그 속에서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절실한 필요는 내팽개쳐지고 있다.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김태양 연세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대학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평균 시급은 3~4만 원 수준이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의 시급은 그보다도 낮은 2만 5000원이다. 근속이 쌓여도 최대 3만 5000원이다.

학교 당국은 코로나로 강의 수요가 줄었다며 수업 시수를 반토막 내고 임

금을 보전해 주지 않았고, 강사들의 임금은 더 줄었다.

강의 외 노동도 문제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회의, 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주말에 무급으로 학교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월 60~70만 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수입을 보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5월 18일,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에 맞선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한국어학당지부 최수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연세대 어학당은 세계 최고의 한국어 교육 기관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교육의 선봉에 서있는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 없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 넘을까 말까 한 월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가족과 친구들 앞에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남몰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어찌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임금에 강의 외 노동까지

25년차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인 전지인 조합원도 ‘세계 최고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노동자 대우는 최저라고 꼬집었다.

“한류 붐을 타서 학생 수가 급증해 매일 6~8시간 수업을 했을 때 학교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최우수 한국어 교육기관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에겐 조금의 보상이나 수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매 학기 학생 2300명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을 듣는다. 외국

인 학생들이 주로 듣는 수업의 수강료가 학기당 170~180만 원에 이르는 만큼, 학교 당국이 한국어학당을 통해 올리는 수입도 상당하다. 그러나 강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방 월세 내기도 힘든” 수준이다.

한편, 학교 당국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노동자간, 노동자·학생 간 이간질을 부추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이경자 분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는 우리와 마주앉으면 우리더러 희생하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학교 당국이 강사들을 우리청소·경비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서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자 대학’으로 꼽히는 연세대에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020년 연세대 연평균 등록금은 893만 원으로 전국 1, 2위를 다툰다. 2019년에는 홍익대 다음으로 적립

금이 많은 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6371억 원).

더구나 서승환 총장은 5월 8일 창립 136주년 기념식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약 1000억 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며 자랑했다. 진실은, 학교 당국이 차고 넘치는 재정을 학생·노동자들에게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6개월 동안 학교 당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노동자들을 무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한국어학당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열악한 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강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양효영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안을 발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장철민 의원안과 양기대 의원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빠르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플랫폼 산업과 이쪽에서의 고용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도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늘어나 2020년 정부 통계로도 배달, 대리운전, 데이터 라벨링, 번역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얻는 노동자가 취업자의 7.4퍼센트인 179만 명에 달한다(물론, 플랫폼 노동이 모든 산업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업 인구가 크게 느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으로 유입되는 노동력도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산업과 노동을 법률 관계 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기존의 노동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보다는 못한 처우와 유연한(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두려 한다. 대체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일부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연



전형적 생색만 내고 실속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입법

한 노동시장을 유지해 플랫폼 기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4법은 이런 방향성 속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 법들을 통해 책임금과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에게 노동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호 방안도 보잘 것없다.

“종사자”와 “중개업자”

정부가 추진하는 4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플랫폼종사자법이다. 장철민 의원안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불충분하다. 특히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이 법은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과 다른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유사성이 크다고 가정한다. 플랫폼 일자리가 “자율성이 극대화”된 노동이라며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이 “자율성이 극대화”된 일자리라니 자영업자라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영위하며 노동 과정을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 “자율성이 극대화”됐다는 말과 달리,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플랫폼 앱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업무를 거부하면 징계나 벌칙을 받기도 한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나 사용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종속돼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이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들이 “종사자”라는 지위로 규정돼 최저임금 적용, 노조 설립과 인정, 법정노동시간 등 여러 권리에서 제외되리라 우려하는 건 완전히 옳다.

플랫폼종사자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인정받은 노동자의 경우에 해당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명시해 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난한 법적 다툼을 해야만 한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종사자법이 적용되면,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이 법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종사자”(유사 자영업자)로 대우할 것이 뻔하다.

플랫폼종사자법이 제시하고 있는 권익 보호 방안도 너무 미비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잦은 업무 조건 변경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플랫폼종사자법은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기업주를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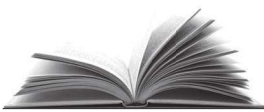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 직업안정법과 짝을 이룬다.)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도 종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일정 기간 전에 공지하라는 수준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는 변덕스러운 플랫폼 알고리즘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플랫폼종사자법과 맞물려 있는 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업소개소 등을 규정하는 직업안정법에 노무중개 제공플랫폼 특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례는 노무중개 제공플랫폼을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은 그저 “중개업”일 뿐이라는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그저 노동자에게 이용약관과 조건을 제공하고, 노무내용,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사전 통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형식적 사항을 준수했다는 걸 내세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나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정책과 일부 복지사업(후계시설 마련, 심리 상담, 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은 흔히 알맹이 빠진 빈껍데기가 되기 일쑤이므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신간 소개 |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장호중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겪는 위기다. 최근 이 두 쟁점을 함께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인 최병두 교수는 도시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해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인류세” 논의를 다룬다. 2부와 3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가,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인류세”의 “세”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개념 중 하나로 중생대·신생대의 “대”, 쥐라기·백악기 등의 “기”에 이은 하위 개념이다. 인류세 논의는 인류가 자본주의 산업 혁명 이후 자연에 영향

을 엄청나게 끼쳤으므로, 현재를 새로운 지질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다. 문명 또는 체제 비판적인 담론이다.

독특하게도 최병두 교수는 인류세를 생태계가 파괴된 현 상태가 아닌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 사회를 뜻하는 용어로 쓰자고 제안한다. 최 교수는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를 다른 무언가로 전환해야 그런 인류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부는 인류세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관련 논의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하다. 다만 여러 주장이 너무 압축적으로 다뤄져, 인류세 논의가 생소한 독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논의들을 다루는데, 코로나19를 자본주

의적 환경 파괴가 낳은 산물로 규정하고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줬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경제 불황도 단지 팬데믹이 낳은 결과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돼 온 경제 불황의 연장선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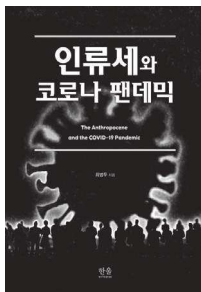
반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 유동성 과잉이 생겨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인플레이 우려가 생기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도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저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 이명박의 녹색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생태주의자들의 ‘탈성장’ 주장과는 다소 달라 보이지만 절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생태주의자들의 ‘탈성장’론은 과학적 근거

도 빈약하고,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운동의 핵심 세력이 돼야 할 노동계급과 빈곤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구호다. 더 거나해지기 위해서 싸우자고?

최병두 교수는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 교회 신자들에게 코로나19 유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낙인찍듯 몰아세운 것을 비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단적 종교 지도자들의 방종’도 비판한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 주류의 ‘이단’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신자들에게도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부에서는 방역 문제로 국가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비판한다.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가 낳은 효과로 방역과 의료 체계 등이 손상된 상황에서 이런 조처들이 도입되다 보니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만 강화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최병두 지음,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저자는 국가의 방역 정책이나 국가 간 경쟁과 갈등 문제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대안을(인간안보, 생태안보 등) 제시하는 데 그친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관한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 문제와 팬데믹에 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들과 그에 관한 비판을 참고하고자 하는 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 비싼 가격을 고려하면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해서 빌려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양효영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선호 씨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작업장 안전을 증진하는 데에도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20대에게서 낮은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이선호 씨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에게 곤혹스러운 일이다.

지난주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이선호 씨의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에게 사과한 건 이런 다급함을 보여 준다.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도 빈소를 방문했다. 정부·여당은 현장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죽음에 자기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잘했으나 현장이 문제라는 식이다. 5월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디서 많이 본 유체이탈 화법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기업주의 이윤을 걱정해 알맹이가 빠진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범위 등을 후퇴시켜 산재 예방과 책임자 처벌 효과를 크게 줄였다. 법 이름 자체에서 ‘기업’도 빼버렸다.

문재인의 말은, 누더기 중대재해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한 외면이기도 하다. 이선호 씨 사망 이후 꾸려진 정부·여당 태스크포스(TF) 단장 김영배도 법 개정 요구에 선을 그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는]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법으로는 대다수 산업재해를 처벌할 수 없고, 원청과 기업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숭숭 뚫려 있다.

기업주들은 이런 법조차 못마땅하다며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우성치는 재계의 눈치를 보며 시행령 제정에서 노사 의견을 모두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후퇴 우려가 있는 것이다.(물론 일부 조항에서는 노동계 의견도 수렴했다고 생색내겠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이선호 씨 유가족에게 사과를 건네며 “안타깝다”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립서비스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노동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당장 법 개정은 어렵겠으니 지금의 중대재해법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도 보지만 더 주되게는 친기업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이선호 씨 빈소에 방문한 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재벌 대기업을 모아 놓고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삼성반도체는 희귀 질환과 암 산재 피해



이선호 씨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도,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지도 못했음을 보여준다. 5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추모 문화제

자를 양산한 ‘살인 기업’인데 말이다. 거기서 문재인은 “불확실성에 맞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 준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문재인은 “경제 성장을 4퍼센트 이상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그대 놓고 질 좋은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니, 이 말인즉슨 기업은 지원하고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민주당 이탄희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매우 미흡하다

민주당 주류의 입장은 아니지만, 5월 13일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벌금형 하한을 다시 도입하고, 판사가 양형을 선고할 때 산재 전문가나 피해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벌금형 하한 도입과 양형특례조항 재도입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산재에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책임자에게 50억 원 이하(사망) 또는 10억 원 이하(부상·질병)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처벌에 하한선이 없으면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치기 쉽다. 예컨대

하한제가 없는 현행 산안법은 최대 벌금을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평균 벌금이 4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탄희 의원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의 더 큰 허점들은 전혀 건들지 않는다. 특히 처벌돼야 할 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외면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상당수 경영주나 사업주가 안전담당자를 앞세워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 책임 공무원과 건설업의 원청인 임대인과 발주처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산재가 벌어지는 50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용이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예 적용 제외됐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처벌 대상 자체가 매우 축소된 상황이라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누더기 중대재해법이 통과될 때 유감을 표하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탄희 의원은 큰 틀에서 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서 언급한 두 조항(하한제와 양형특례조항)이 후퇴한 것만 주되게 비판했다.

현재 제계는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요구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범위도 대폭 축소해 처벌 대상 자체를 줄이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봐도 이탄희 개정안은 기업주들을 제대로 규제하기에 너무 미흡하다.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포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 죽었어도 바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 원청에서 비용절감(위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적정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일하러 가는 작업장이 아니고 도살장이었다.”

이재훈 씨는 그동안에도 “안전요원 부재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윤 욕심에 벌어진 사고”라고 비판해 왔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씨도 노동자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와 기업주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오히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참담하다. (이선호 씨의 죽음에)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 흡사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산재사고 사망,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을 파헤쳐 보면 대부분 인

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국가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다. 형편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경영계는 (이마저도) 의무·책임을 축소하려 한다.”

지난 5월 12일, 이선호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의 원청사인 동방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업무 통폐합, 하청 구조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동방 측은 불법파견 소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 ‘시늉’으로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인 듯하다.

추모 문화제가 열린 이날 오후, 대통령 문재인은 고 이선호 씨의 빈소를 방문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TF를 꾸려 현장긴급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도 말로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정부가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고 하청·외주화를 유지하는 동안, 비극적 죽음도 계속돼 왔다. 문재인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지 오래다.

따라서 이선호 씨의 비극적 죽음을 만든 것은 (원청) 사측과 정부이다.